

보도자료 2008. 11. 18.	 <div>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div>	
	담당부서	양형위원회
	담당자	운영지원단장 김우진 (☎ 3480-1924)
	공보관실 ☎ 3480-1451	

양형위원회, 제1차 공청회 개최

- 살인, 뇌물,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안 수립
- 범죄 유형 구분 ⇒ 유형별로 세분화된 형량범위 제시
- 집행유예의 일반적 기준 제시
- 최초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 형사사법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공청회 개요

- 명칭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차 공청회’
- 살인, 뇌물, 성범죄 -
- 일시 : 2008. 11. 24.(월) 14:00 ~ 18:40
- 장소 : 서울법원 종합청사 서관 제417호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공청회 개최 의미



○ 양형기준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과 상식을 반영

- 위원회는 2009. 4. 양형기준제 시행을 목표로 양형기준을 마련 중임
-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 작성된 최초 양형기준안을 공개함으로써 양형기준안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 공청회 결과는 향후 위원회 심의과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

○ 공개적이고 투명한 업무 프로세스 구현

- 양형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와 운영규정 제16조에 근거하여 개최
-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 종국적으로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 양형기준안 설정 대상범죄

- 제1기 양형위원회(2009. 4. 26.까지)는 우선적으로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무고에 관해 양형기준을 설정함

- 살인범죄 : 범죄의 중대성 및 양형기준의 상징성 고려
- 뇌물죄, 성범죄 : 높은 사회적 관심 반영
- 위증, 무고죄 : 개정 형소법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한 필요 고려
- 횡령·배임 범죄 :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국민적 기대 반영
- 강도죄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대범죄인 점 고려

○ 공청회 회부 대상 양형기준안

- 제1차 공청회 : 살인, 뇌물, 성범죄
- 제2차 공청회 : 강도, 횡령·배임, 위증·무고(2009. 1. 예정)

■ 양형기준안의 특징

○ 범죄별 유형구분을 통한 합리적인 형량범위 제시

- 개별 범죄의 특성을 살려 범행유형을 구분한 다음 각 유형별로 세분화된 형량범위를 제시
 - 예컨대, 살인죄의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사형으로만 규정된 법정형을 유형구분을 통해 9개의 처단형 범위로 나누어 제시
- 구체적인 형량범위 설정방법은, 원칙적으로 양형실무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기초로 산출된 형량범위를 토대로 하되,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은 뇌물죄, 성범죄에 관해서는 규범적 조정을 가하는 방식 채택

○ 범죄별로 구체적 양형인자와 평가원칙을 제시

- 범죄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경중에 따라 특별/일반양형인자, 가중/감경인자로 구분하여 제시

- 평가원칙에 있어, 행위자에 관련된 요소보다 범죄행위 자체에 관련된 요소를 중하게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형사법의 대원칙인 “행위책임의 원칙”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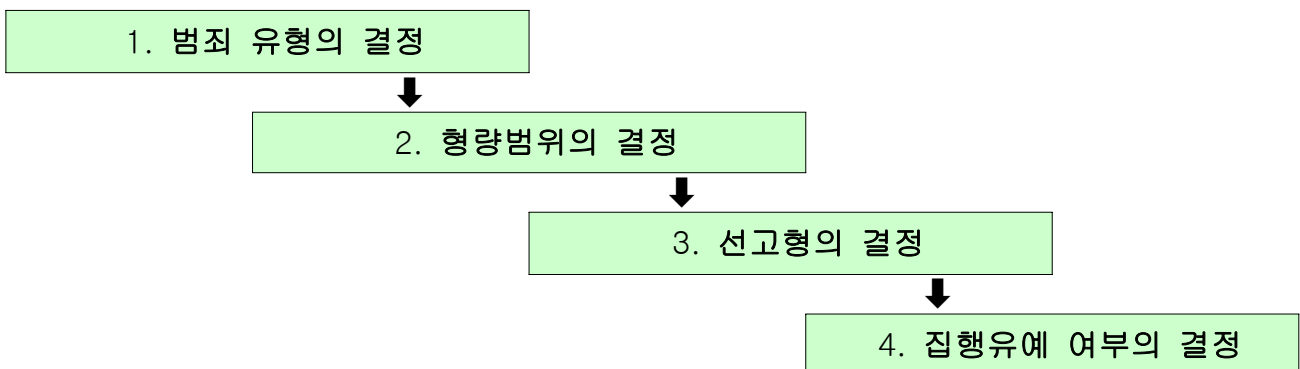
○ 집행유예의 일반적 기준 제시

- 집행유예 기준 설정을 통한 양형편차 시비 해소 필요
- 집행유예 결정 시 부정적/긍정적으로 참작되어야 할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참작사유 분류 및 제한
- 특히, 뇌물죄에 관하여 관행적으로 집행유예 결정 시 참작 사유로 실시되던 사유 중 고려해서는 안 되는 요소를 명시하여 ‘형벌 외적인 불이익’을 배제

○ 종합 : 우리나라 법체계에 적합한 고유한 양형기준 설정

- 미국 연방식, 영국식 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고 독자적인 한국형 양형기준 모델의 창출

● 양형기준의 적용순서



■ 양형기준안에 따른 양형실무 개선 효과

○ 양형의 일관성과 적정성 제고

- 범죄의 특성을 살려 유형화한 다음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로 제한된 형량범위를 제시하여 양형의 일관성 제고
- 범죄 및 범죄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양형인자를 선정하여 양형심리를 유도함으로써 구체적 사건에 적합한 양형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여 양형의 적정성 도모
- 집행유예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뇌물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정 시 참작 배제 요소까지 명시함으로써 집행유예 부가 여부에 대한 편차 시비를 불식

○ 엄정한 양형의 구현

- 뇌물죄와 성범죄에 관해 종전 법원의 양형실무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다음 형량범위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는 엄정한 양형이 실현되도록 함
-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집행유예 결정과 관련된 엄격한 심사체제 도입

○ 양형심리절차의 충실화 도모

- 양형인자의 존부와 정도에 집중된 당사자의 공방을 유도하여 양형심리의 충실화 도모

■ 살인범죄 양형기준안의 주요 내용

○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또는 경위)를 중심으로 유형 구분

- ‘보통 살인’ 외에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유형을 별도 구분
-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의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와 같이 범행 동기에 있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살인을 별도 유형으로 처리
- 이른바 ‘묻지마 살인’과 같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경우나 돈을 받고 청부살인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범행 동기에 있어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살인을 별도의 중한 유형으로 처리

○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소 : 계획적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등
- 형량을 감경시키는 요소 : 자수,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등
- 복수 양형인자 평가 원칙 제시

○ 살인미수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 제시

- 집행유예 결정 시 고려할 요소
 - 긍정적 고려 요소 : 초범, 피해자 유발이 강한 경우 등
 - 부정적 고려 요소 : 2회 이상의 동종 전과, 계획적 범행, 중상 또는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등
- 고려할 요소에 대한 평가원칙 제시

■ 뇌물죄 양형기준안의 주요 내용

○ 뇌물액수를 기준으로 유형 구분

- 뇌물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 반영

○ 엄정한 형량범위 제시

- 엄정한 형량범위 제시를 통해 종전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을 모색
 - 예컨대, 5천만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인 실형 권고
- 부패의 고리를 단절시키고자 뇌물공여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기준 제시

○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소 : 불법적인 업무처리로 나아간 경우, 공무원이 먼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개인적인 치부나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한 뇌물 수수 등
- 형량을 감경시키는 요소 : 자수,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등
- 복수 양형인자 평가 원칙 제시 : 살인죄와 동일

○ 집행유예 기준 제시

- 집행유예 결정 시 고려할 요소
 - 긍정적 고려 요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등
 - 부정적 고려 요소 : 적극적 요구,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 집행과 관련된 경우 등
- 집행유예 결정 시 참작 사유로 고려하지 말아야 할 요소
 - ① 신분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
 - ② 부정한 이익의 몰수
 - ③ 본건 관련 징계처분
- 고려할 요소에 대한 평가원칙 제시 : 살인죄와 동일

■ 성범죄 양형기준안의 주요 내용

○ 피해자 연령과 범행수법·결과를 종합 고려한 유형구분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별도의 가중 유형으로 구분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별도의 가중 유형으로 구분
- 강간 유형 내에서, 주거침입강간, 강도강간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는 가중유형으로 처리하여 일반 강간에 비해 높은 형량범위를 부여

○ 엄정한 형량범위 제시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가중 처벌
 - 가중처벌을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엄정한 형량범위 설정
 - 예컨대, 13세 미만 대상 강간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실형 권고 (권고형량 4년 ~ 9년)
- 강간살인범에 대한 중형 권고
 -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강간살인범에 대해서는 기본 영역에서도 무기징역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
 - 특히 가중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이상을 권고

○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소 : 성적 수치심 증대(피해자의 가족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등),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약물을 투약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 등
- 형량을 감경시키는 요소 : 자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다만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합의 제외) 등
- 복수 양형인자 평가 원칙 제시 : 살인죄와 동일

■ 위원회 경과

○ 설립

-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07. 1. 26.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7. 4. 27. 출범

○ 위원회 현황

● 위원회

-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법관 위원 4명, 검사 위원 2명, 변호사 위원 2명, 교수 위원 2명과 기타 전문가 위원 2명으로 구성

● 전문위원

- 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 수행
- 법관 3명(수석전문위원 1명 포함), 검사 2명, 변호사 3명, 교수 및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

● 운영지원단

- 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한 사무기구
- 운영지원단에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통계분석과 설치

○ 회의 개최

● 위원회 회의

- 2007. 5. 2.부터 2008. 11. 11.까지 정기회의 12회, 임시회의 2회 개최

● 전문위원 전체회의

- 2007. 7. 18.부터 2008. 11. 3.까지 정기회의 12회, 임시회의 3회 개최

○ 주요 활동

● 외국 양형제도 연구

- 영국, 미국 연방·각주,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일본 등

● 양형자료조사 실시

- 양형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확정된 약 4만 3,000건의 형사사건을 조사
- 유례 없는 철저하고 광범위한 양형자료조사 수행

● 설문조사 실시

- 일반인과 법조계의 양형에 대한 인식을 확인
- 일반인 1,000명, 전문가 2,294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및 전자우편방식 조사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방식 결정(2008. 7.)

- 하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 ⇒ 개별적 양형기준
- 양형인자의 계량화 방식 및 정도 ⇒ 유형분류 + 양형인자 질적 구분
- 양형기준 설정 순서 ⇒ 점진적 설정방안
- 최초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무고

○ 향후 일정(시행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2008. 11. ~ 2009. 1. 제1차 공청회 및 의견조회

● 2009. 1. ~ 2009. 3. 제2차 공청회 및 의견조회

● 2009. 1. ~ 3. 양형기준 매뉴얼 보고 및 양형기준 적용효과 분석

● 2009. 4. 양형기준 공포, 시행

● 2009. 5. ~ 양형기준 운영 점검